

교육감·학부모 “교부금 축소 안 된다”… 정부 개편안 반발

대한민국교육감협 공개 토론회
활용할 수 있는 자원 15% 수준
공교육 재정 줄면 사교육 부담 커져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단체가 교부금 축소에 반대했다. 교부금의 약 85%가 사실상 고정성 경비로 쓰여 교육청이 정책이나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15%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일부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 초·중·고 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현진 기자

었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교부금 전체를 교육청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1%는 일선 학교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쓰인다. 이를 제외하면 교육청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사

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약 25%다. 여기에 교부금의 10% 인편인 학교 무상 급식비를 제외하면 실제 조정 가능한 자원은 약 15%만 남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기존 지방교육재정의 축소와 재배분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투자자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되며 농산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도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교육 등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감축이 이주배경 학생과 저소득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 고정경비로 구성돼 실제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학교 수는 2021년 1366곳에서

2025년 1387곳으로, 교원 수는 같은 기간 5만7954명에서 6만871명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83만8837명에서 75만6698명으로 감소했다.

조 전 실장은 “노후시설 개선과 과밀·과소 학교 문제, 이주배경·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원·학부모단체도 교부금 축소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냉난방비와 전기요금,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교부금이 줄면 학급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먼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 재정이 줄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이 줄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불광동에 31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불광동 359-1 일대 신축통합기획 확정
총 33만8000㎡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

서울 불광동 연신내 역과 은평뉴타운 사이 노후 주거지가 최고 29층 약 3100세대 대규모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광동 359-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축통합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

대상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하고, 북한산·향림근린공원 등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이다. 고양·은평구를 연결하는 통일로·연서로를 끼고 지하철 3·6호선, GTX-A·E(예정)가 통과하는 연신내역 배

후 주거지로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게 강점이다. 반면 1960년대 형성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지가 많이 보행과 차량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주민·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간담회·설명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축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축통합기획에 따라, 시는 구릉지형과 학교 일조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불광2동 미래를 여는 첫 주자로 학교·주변지역과 상생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지는 지난 2월 신축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신축통합기획 수립 예정인 불광동 442·445 일대 개발에 대응해 마련된다. 3개 단지 모두 정비시 총 33만 8000㎡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는 최대 2단계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며 “이번 신축통합기획을 통해 불광동 359-1 일대가 교육·자연·교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불광2동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초등 신규교사, 첫 전보 최대 2년 유예

특수교사는 3년 뒤 선택 가능

서울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는 첫 정기 전보 시기를 최대 2년 늦출 수 있고, 특수학급이 1개뿐인 학교의 특수교사는 3년 근무 뒤 전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3월 1일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등교사에게 정기전보 주기 5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학급을 1개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하면 3년 이상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규교사에게는 전보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뒤 처음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두

차례, 최대 2년간 전보를 미룰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수 특수학급 교사가 같은 학생과 학부모를 최대 5년간 담당하는 근무 특성과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보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확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전보원칙은 2026년 8월 안내되며 2027년 3월 1일 자 인사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근무 여건에 맞춰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보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원자력연·SK하이닉스, 경주 양성자가속기 활용 협력

고에너지 입자빔 활용 연구 등 추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가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반도체 방사선 신뢰성 평가 기술 고도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경주시는 28일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준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주 양성자가속기와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를 활용해 반도체 방사선 영향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고, 양성자빔 공동 활용과 우주·대기방사선 환경을 모사한 반도체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고에너지 입자빔 활용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한다.

방사선 영향평가는 우주와 원전 등 방사선 환경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상에서 시험·검증하는 기술이다. 최근 AI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송준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28일 경주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반도체 방사선 신뢰성 연구센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 자율주행,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주 양성자가속기는 현재까지 1천200여 건의 연구과제와 3천700여 명의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전체 빔서비스의 약 40%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2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국제 수

준의 방사선 영향평가와 인증시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장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통해 반도체와 우주항공,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중심도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세종~공주 광역BRT 내년 1월 개통 ‘속도’

충청광역연합, 운영체계 등 확정

충청광역연합이 내년 1월 세종~공주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사업의 정상 개통을 목표로 운영체계와 연계 노선 등 주요 현안을 확정하며 개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8일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광역BR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와 면허 방식, 연계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단일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6년 이내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충청광역연합과 세종시, 공주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운영협약을 체결해 기관별 역할과 비

용 분담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기존 광역BRT 노선을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공주시내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백제큰디리를 경유하고, 제2급강교 개통 이후에는 교통 여건에 맞춰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BRT 운영 조례’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운영비 국비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은 현재 세종시 구간 81.5%, 공주시 구간 77.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8월 인허가 변경 절차를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충청=양대승 기자 zzica@